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38
----------	------

발의연월일 : 2024. 10. 28.

발 의 자 : 허종식 · 김교홍 · 김정호
노종면 · 모경중 · 박선원
박성준 · 어기구 · 유동수
윤준병 · 이재관 · 정일영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회사)을 집중적으로 인수하면서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및 차입매수 등의 행위로 인한 버스사업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그런데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양수가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고 차고지의 매각 및 개발 행위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승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

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의4제1항 신설).

나. 시·도지사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다.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규모 및 운용경력, 재정상태 등의 요건을 갖춘 사모투자집합기구에 한하여 인가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라.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와 경영건전성 유지 약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마.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이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병하거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합

병하는 경우 5년간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5항 신설).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금원에 대하여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제1항 신설).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에 운송수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당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제2항 신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담보, 사채나 주식매입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0조의4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차고지의 매도 등 허가)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매도·증여 및 교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차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모집합투자기구의 양수자격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1억 원 이상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을 2년 이상 운용한 경력이 있는 국내 금융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자가 될 자격이 있는 국내 투자자로만 구성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수익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4.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한 사모투자집합기구(양수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 집합기구인 경우 포함)가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한 업체수 및 면허대수 기준이 각각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할 것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사모집합투자기구(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인을 포함한다)는 차고지 매각 및 배당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투자전략 계획서와 경영건전성 유지 약속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2. 최대주주 또는 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와 관련하여서는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인과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합병 후 5년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회계의 자산으로 다른 한쪽 회계의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

제20조의3(과잉배당 등의 금지) ① 제50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원을 배당할 수 없다.

1. 직전 회계연도에 순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한 경우
2.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이익잉여금
3. 차고지를 매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차고지 매각대금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원

② 제1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에 운송수지율(요금수입을 운송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 이상으로 배당할 수 없다.

제20조의4(보증 등의 제한)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최대주주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최대주주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
2.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채 또는 새로운 주식이나 지분을 최대주주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인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차등지원할 수 있다.

제85조제1항에 제15호의2·제15호의3 및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의2.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전략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15의3.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 18의2.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배당을 한 경우

- 18의3.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배당을 한 경우

- 18의4.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경우

제9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제9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14조의2제3항 각 호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고지 매각 등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매도·증여 및 교환 등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양수자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잉배당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양수 신고를 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보증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양수 신고를 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최대주주인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재정지원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제5조의4(차고지의 매도 등 허가)</u></p> <p>① <u>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매도·증여 및 교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차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u></p> <p>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p> <p>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p> <p>② <u>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p>
<p>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생략)</p> <p>②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u></p>	<p>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대통령령-----</u> ----- ----- -----</p>

·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 ⑩ (생략)

<신설>

-----.

-----.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사모집합투자기구의 양수자격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1억 원 이상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

산을 2년 이상 운용한 경력이
있는 국내 금융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
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에 출자자가 될 자격이
있는 국내 투자자로만 구성되
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의 운용 수익으로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인건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같
은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4.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한 사모투자집합기구(양
수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
투자 집합기구인 경우 포함)
가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을 양수한 업체수 및 면
허대수 기준이 각각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할 것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사모집
합투자기구(최대주주가 사모집
합투자기구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법인을 포함한다)
는 차고지 매각 및 배당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포함된 투자전략 계획서와
경영건전성 유지 약속서를 국
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
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자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2. 최대주주 또는 지분의 100분
의 1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에 노선 여객자동차운

<신 설>

송사업자 법인의 경영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와 관련하여서는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
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 법인과 그 사모집합투자기
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
동자동차운송사업자 법인이 합병하
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
멸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
업자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합병 후 5
년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
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회계의 자산으로 다
른 한쪽 회계의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

제20조의3(과잉배당 등의 금지)

① 제50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원을 배당할 수 없다.

1. 직전 회계연도에 순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한 경우
2.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이익잉여금
3. 차고지를 매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차고지 매각대금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원

② 제1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에 운송수지율(요금수입을 운송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 이상으로 배당할 수 없다.

<신 설>

제20조의4(보증 등의 제한)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노선 여객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 ③ (생략)

<신 설>

자동차운송사업자와 최대주주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최대주주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

2.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채 또는 새로운 주식이나 지분을 최대주주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인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5. (생략)

<신 설>

<신 설>

차등지원할 수 있다.

[illegible]

1. ~ 15. (현행과 같음)

15의2.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전략에 관한 계획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
출한 경우

15의3.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
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

<p>16. ~ 18.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19. ~ 41.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3. ~ 10. (생략)</p> <p>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p> <p><u><신설></u></p>	<p><u>지 아니한 경우</u></p> <p>16. ~ 18. (현행과 같음)</p> <p><u>18의2.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배당을 한 경우</u></p> <p><u>18의3.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배당을 한 경우</u></p> <p><u>18의4.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한 경우</u></p> <p>19. ~ 41.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90조(벌칙) -----</p> <p>-----</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u>2의2.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u></p> <p>3. ~ 10. (현행과 같음)</p> <p>제94조(과태료) ①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제14조의2제3항 각 호를</u></p>
--	---

<p>2. ~ 5. (생 략)</p> <p>② ~ ⑤ (생 략)</p>	<p><u>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u> <u>자</u></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